

‘고수익 미끼’ 유사수신 사기 기승

가상화폐 체굴기 판매를 빙자해 수천억원을 가로챈 유사수신업체 등 검찰이 지난해 적발한 유사수신 사기범은 총 1294명으로 드러났다. 2016년 대비 19.2%가 늘어난 결과였다.

21일 대검찰청 형사부(부장검사 이성윤 검사장)는 ‘최근 FX미진거래 펀테크, 가상화폐 등 혁신 금융 사업에 투자하면서 고수익을 내준다고 유혹하는 유사수신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수사해 적발한 사기사범은 1294명이다. 2015년에는 633명, 2016년에는 1085명이었다.

금융감독원에 유사수신 혐의의 업체로 신고된 건수도 2013년 88건에서 지난해 712건으로 5년 새 9배 가까이 늘어났다. 유사수신 범죄로 입건돼 검찰에 접수된 인원도 2013년 1532명에서 지난해 3223명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최근에는 가짜 가상화폐 투자나 가상화폐 체굴을 미끼로 돈을

작년 1294명 적발…2016년 대비 19.2% 증가

금융·부동산·투자사업 사칭… 고수익 의심

가로채는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인천지검은 가상화폐 체굴기 판매 등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54개국 1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2700억원을 빼돌린 유사수신 사기조직을 적발해 36명을 입건하고 그중 18명을 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도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7개월만에 2배 이상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만2000여명에게 370억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또 시설금융펀드를 운영하면서 선물옵션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493억원을 빼돌린 유

사수신 업체 모집책 등 10명이 적발된 사례와 크리우드펀딩을 빙자해 2200여명으로부터 147억원을 가로챈 유사수신 업체도 적발됐다.

보험설계사를 투자자 모집으로 활용하거나 여행 상품과 결합한 단계식 소액 투자수법도 등장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금감원 ‘서민금융133’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원금보장 내지 고수익 약속의 경우 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설명 내용을 녹음하고 계약서·팸플릿 등 자료 확

보가 필요하다”고 대응요령을 설명했다.

법원도 유사수신 사기조작에게 종형을 선고하고 있다. 청원지법은 지난달 농아인 복지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며 농아인 150여 명에게 97억원을 편취한 사기조작 종책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유사수신 사기조작에 대해 최초로 범죄단체를 적용한 사례다.

수원지법에서도 주식투자를 빙자해 330억원대를 빼돌린 유사수신 업체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계임기업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3600억원을 가로챈 유사수신 업체 대표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유사수신을 비롯한 불법사금용 일제단속 및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대검 관계자는 “유사수신 업체에 엄정 대처하고 범죄단체 혐의 적용, 종형 구형 등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5·18 진상규명위

실무지원 등 추진

국방부

국방부는 20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활동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군사법원 업무 보고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날인 20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5·18특별법)을 의결했다. 5·18특별법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해 5·18 당시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와 폭력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상규명조사위는 국회의장 추천 1인과 여당 추천 4인, 야당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인 등 9인으로 구성된다.

국방부는 특별법 제정 후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지면 조직 구성, 운영 규정 제정, 예산·사무실 확보 등 실무작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무가 종료된 국방부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특별조사위원회(5·18특조위)의 조사결과 보존 등 후속조치도 4월까지 완료한다.

뉴시스



소원풍선 날리는 새내기들 21일 오전 부산 사상구 신라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2018학년도 입학식에 참가한 신입생 2100여 명이 각자의 소망을 적은 리본을 매단 풍선을 날리고 있다.

전국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10명 소재 불명

교육부는 올해 취학 대상 아동중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10명이라고 밝혔다. 작년 같은 시기 98명에 비해선 감소한 숫자다.

교육부는 경찰청과 함께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에 대해 예비소집 단계부터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협동으로 소재와 안전을 집중점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예비소집은 시·도교육청별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실

시했다. 지난해 예비소집 최종일이 2017년 1월 20일이었던 것에 비해 8일 앞당겨 실시한 것이다.

교육부는 예비소집을 통해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읍·면·동장과 협력해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 사실 확인, 가정방문, 내교요청을 통한 면담 등을 실시해 왔다.

작년 같은 시기의 소재 파악 중이었던 아동 98명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뉴시스

교장이 즉시 관할 경찰서에 아동소재 조사를 의뢰하거나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취학 대상 아동 48만4224명 중 현재(20일 기준) 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10명이다.

작년 같은 시기의 소재 파악 중이었던 아동 98명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인도, 18억 달러 사기사건 용의자 11명 체포

인도에서 16억 달러(약 1조 9344억원) 규모의 은행 사기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체포된 용의자가 11명으로 늘었다.

수사 당국은 20일 6년 전부터 벌어진 이번 은행사기사건 관련 주요 용의자 2명이 운영하는 보석회사들을 조사하면서 경영진 5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주요 용의자인 재벌 보석상 나라브 모디와 그의 삼촌 메훌 촉시의 행방은 현재 묘연하다.

중앙수사국(CBI)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체포한 경영진 5명은 파이어스타 그룹 등 모디와 촉시가 운영하는 회사들에서 근무하면서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체포한 사람이 모두 11명이라고 밝혔다.

모디는 가짜 은행거래 내역을 담은 서신을 이용해 대출을 받으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대출을 진행한 은행은 국영핀자브국영은행(PNB)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문 제틀리 인도 재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PNB의 운영과 회계감사 부실을 비난하면서 “이번 사건은 국가와 납세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비용을 아끼겠을 뿐 아니라 차입·추가 사건 조사 등 간접비용도 초래했다”고 밝혔다.

미 전투기, 日 호수에 연료탱크 버려 논란

아오모리현 주일미군 기지 소속 전투기 1대가 이를 직후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료탱크를 인근 호수에 버리고 긴급 착륙한 것과 관련해 일본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연료탱크가 떨어진 호수 주변에는 재첩잡이를 하던 10여척의 어선과 어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조업중이던 어민들이 많이 놀라 데다가 이날 잡은 재첩도 출하하지 못하는 등 피해도 있어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21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전날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에서 이륙한 미공군 제 35 전투항공단 소속 F16 전투기의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전투기 조종사는 연료탱크 2기를 인근 오가와라(小川原) 호수에 버리고 기지로 돌아와 긴급착륙했다.

당시 호수에서 재첩잡이 중이던 아마다 마사히코(山田正彦)는 “굉음을 들리면서 얼음이 언 호수 위에 뭔가 물체가 떨어지면서 약 15m의 물줄기가 치솟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엄청난 물보라에 놀랐는데 다친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라면서 기습을 쓸어내렸다.

오가와라 호수는 연평균 약 1200의 재첩이 잡히는 일본 제1의 재첩 산지다. 재첩은 제철인 지금이 가장 맛있고 가격도 비싸다.

오가와라 어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호수에서는 100여척이 조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조업도 중단됐으며 이날 체취한 재첩도 출하하지 않기로 했다. 기름이 흘러나와 재첩에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첩과 함께 이 호수에서 많이 잡히는 빙어, 뱃어 조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리아 구타 공습에 이틀새 250명 사망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 지역에 대대적 공습을 단행하면서 이를 민에 250명이 숨지고 1000명이 다쳤다. 시리아에서 ‘홀로코스트’(2차 대전 당시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 같은 대학살이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시리아 인권관총소(SOHR)는 20일(현지시간) 정부군이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 동구타 지역에 이틀째 공습과 포격을 이어가면서 이날만 최소 10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SOHR는 이로써 이를 민에 동구타에서 250명이 사망하고 1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거나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시리아 의료구호 단체 연합(UMCRO)은 공습으로 병원 10곳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시리아 반군단체 ‘이슬람군’의 모하메드 알로쉬는 “지구상에서 가장 더러운 정권에 의해 새로운 홀로코스트가 벌어지고 있다”며 시리아와 이란 비자르 알 아사드 정권이 “2차 대전 이례 전례 없는 사탄의 동맹”을 맺었다고 비판했다.

악명을 요구한 한 다마스쿠스 주민은 건물 복도에 숨어서 공습을 지켜봤는데 규모가 몇 달 새 최대였으며, 포탄이 비처럼 쏟아졌다라고 증언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현지에 있는 활동가들은 정부군이 반군의 마지막 거점인 동구타 일대에서 월신 더 광범위한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 공습을 강화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유엔 중재 시리아 평화 협상에 반군 대표로 참가해 온 나스르 알 하리리는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군이 동구타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규탄했다.

정부 3.0

모두, 안녕하세요?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국가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

